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기현호



가장주부가 소자본으로 외식업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아이템은 무엇일까. 커피전문점이다.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달인력은 물론 조리를 위한 전문적인 노동력, 넓은 공간이 필요없어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 호감을 갖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개업만 하면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시장 진입장벽 낮추고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누구나 치킬 수 있다는 특징, 바로 그 장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근에 언제든지 다른 경쟁 커피전문점이 들어설 수 있고 가게가 들어날수록 영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용어를 빌여 설명하면 커피전문점은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고 표현된다.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공급에 참여하고, 그 공급과 수요가 어떤 격차에 있어서 일치해 자원이 완벽하게 분배되는 시

장이 완전경쟁시장인데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현실속의 모든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과점의 불완전경쟁시장이다.

시장에서는 제품의 질과 가격으로 판매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동종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따라서 공급자들

경쟁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은 품질이 비슷할 경우 이익을 내기 위해 결국 가격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낮춰 경쟁자를 빠져시키는 방안을 동원한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진입장벽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과거 전남지역의 한 기업이 정유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영업망을 확충하지 못했다.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수준의, 기존 거래 청유사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몇 개 주유소만 운영하고 있다. 이유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정유사들이 가격 인하로 압박해 오면 버틸 자

하지만 이처럼 인하경쟁을 벌인다 해서 그 시장이 모두 바람직한 시장은 아니다. 그들의 가격경쟁은 수요자와 거리가 먼, 결국 과점이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전투에서 승리한 몇 개의 거대기업만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한다. 더 이상 후발업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가 새로운 공급을 창출할 수 없음은 말할 나위없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고쳐야만 자신들이 목을 때는 경제성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일수록 정부가 만들어 준 높은 진입장벽 안에 안존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다. 결국 생산성은 떨어지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배제되는 등 시장질서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 보호막 거둬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부하고 있는 삼성마저도 로비자금과 관련돼 고온을 치른 사실은, 그런 자금없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아달라며 권력의 힘을 빌리고 권력을 기꺼이 받은 대가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행하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세계 총수들과 만나 기업규제법을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규제는 물론 후발업체의 진입을 막는 기존 대기업의 보호막을 거둬 치우고 정부는 이제 빠져야 한다. 기업은 책임임없이 생겨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능력없으면 퇴출당하는 자율적 순환구조가 정착돼야 한국경제는 강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고쳐야만 자신들이 목을 때는 경제성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부정〉 ki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칼럼

최희동



키 주니어(Key Jr.)는 30년 전 이미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고 자신의 책에서 주장했다. 언론들은 이번 4·9총선의 결과를 놓고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표현했다. 새로 출범한 MB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오만함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여줘 유권자는 현명하고 또 무섭다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이다.

요즘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주인공 이산은 조선시대 임금이었던 정조의 이름이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조선 후기 역사에서 높게 평가

를 중시하면서도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면서도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협상을 포옹하지 못하며, 국익을 위한다면 서사대외교를 한다면 이것은 미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정치가 아닌가.

국민들이 보수화되었다는 것은 적각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구호만 요란했던 10년의 진보를 싫어했지만 보수로 회귀했던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진정 보수를 원한다면 어떻게 강기갑이 이방호

경청(敬聽)의 정치

받은 임금이다.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할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굶어 죽은 현실을 겪었고, 본인 역시 임금이 되기까지 노론의 온갖 음해와 방해, 나아가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정조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 즉위 일성으로 노론을 떨게 만든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과거의 희귀를 거부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걸었다. 가슴속의 분노와 증오, 화기를 정신(正心)-마음에 노함이 있으면 얻을 수 없는 수양단계)으로 다스리면서 백성을 최우선에 두는 마음으로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등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며 조선의 미래를 밝혔다.

드라마 이산을 보면서 자꾸 지금의 정치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정부의 실패와 경제를 살피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현 정권은 현장정치

를 꾸을 수 있었으며, 문국현이 이재오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유능한 세일즈맨들을 우리는 흔히 단변가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업의 신화를 이룬 이들을 분석해 보니 단변가가 아니라 경청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사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단단하고 쉬울 것 같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들고 청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기에 정치인에게 제일 필요한 소양은 경청하는 마음이다. 경청은 국민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기 때문이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우선의 덕목이기에 그렇다. 왜 참여정부가 실패했고 MB정부가 탄생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여야 만이 국가를 죠고 질려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고

안원태



지난 2월 25일 엑스포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엑스포지원법이 관광산업시설과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만 지원해 되었고 구체적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 주관기관도 뚜렷하지 않다. 광주·전남 출신 각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전라도 장관이 많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크게 얻은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 지역이 국제적 프로젝트를 꾸려내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것이 문제다. 유치·유발 효과를 과장하고 잠고대 하듯 토목공사비 계산만 한 '하드웨어'만

다. 경남·제주의 도지사까지 불러 순찰하고 주민 뒤고 파이팅 외치지만 '여수엑스포'는 순전, 광양반 지나면 누구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수를 넘어 전남 박람회로 거듭나야 한다.

다음으로는 참가국들의 기억에 남을 '전시 내용'을 짜내야 한다. 또 경제·문화·해양·과학기술의 선진국과 단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단 계획'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업을 전남도가 맡아서 해야 한다. 정치 지망생, 토목·건축업자 를 밀쳐내고 전문가들을 모아 '엑스포'

여수엑스포 넘어 전남엑스포로

세우고 엑스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팔아낼지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한 것은 아닌가.

정부와 국회, 사회단체의 정책 계획자들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국고와 정책 지원의 범위를 이미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장만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역 인프라 확충은 엑스포 구상 단계에서부터 가장 큰 과제였다. 엑스포는 지방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뒷을 이끌어내야 한다. 목표와 겨냥, 그리고 시행이란 대형 프로젝트가 빙림없이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준법성, 순응성, 투명성이라 삼박자가 지켜지는 프로젝트, 즉 생산적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여야 만이 국가를 죠고 질려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먼저 '전남 박람회'로 바로 세워야 한

를 대대로 개최해야 한다. 이 전문가들을 찾아 협연, 지연, 학연을 엮어내야 한다.

전남발전연구원도 있고 전남개발공사도 있다. 코트라도 부릴 수 있다. 국회 의원, 유치, 기관장을 출판 인사들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적재적소에 뚜어놓은 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고 눈 흘기고만 있을 것인가.

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전남도의 의지와 자체에 달렸다. 엔드류 카네기의 묘비에 새겨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 사업에 동원할 줄 아는 사람'이 전남도이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일본의 사람 중심 교통문화 배우자

일본 후쿠오카는 차도는 좁고 인도는 넓다.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거기에서 좁은 인도에 각종 교통시설물까지 설치돼 걷기가 불편하다.

일본 사람들은 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 필자도 자전거로 시내 관광을 했다. 도로횡단을 해야 하는데 신호등이 없었다. 차들이 좀 헤매질 때 건널 요량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고 옆 인도에서 있는데 골바로 승용차와 버스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횡단보도 앞에 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운전자들은 멈춰 서 있는 필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라는 손짓을 해줬

다. 그 뒤로 몇 개의 횡단보도를 더 건넜는데 그 때마다 승용차들이 멈춰섰다. 오히려 필자가 미안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차를 멈추는 건 고사하고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해 걷는데도 승용차들이 멀고 들어온다. 심지어 비키리며 빵빵거리고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것도 다반사다. 학교 앞 스쿨존이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다. 이같은 불평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교통문화를 배워으면 한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총동

어버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5월 8일은 어버이 날이다. 자식으로서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냉고 길러준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자식들은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간다. 결국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마음으로 감사와 보답을 할 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부모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자식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 차마 자녀들의 직장일이나 사업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같은 수록 자식들로부터 멀어져 와롭고 고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학가족제도의 급속적인 확산으로

요즘 세대에 부모들은 자녀에게는 무한정으로 베풀면서 자식들은 부모님이나 웃어른께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만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물질만능주의와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로 변모되면서 어른들에게 대한 공경과 효도는 점차 퇴색해 버리고 부모보다 자식만을 먼저 쟁겨주는 풍조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식어가고 꺼져가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효도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어버이 날은 어린이 날처럼 공휴일로 지정해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식이 만나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정동

시설

전남 AI 진정세 긴장 풀 단계는 아니다

전남지역의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29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영암 신복과 담양 대전, 나주 다시 등 3건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일반 질병으로 판정됐다. AI의 주가 확산을 우려해온 농민들에게 매우 다행이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접수된 AI 의심신고는 모두 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영암 신복과 담양 등 2건이 AI 양성으로 판정됐고 17건은 일반 질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한 결과는 1주일 후쯤 나올 예정이지만 전남도는 양성일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당국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낮은 기준으로 유태 지역에서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신복·담양·나주 등 3개 지역에서 AI 양성이 확인됐다. 나머지 21건에 대한 결과는 1주일 후쯤 나올 예정이지만 전남도는 양성일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빨간 불' 경제, 체질 강화 대책 서둘러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쳐면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갑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28일 청와대에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를 97조원으로 늘리고 고용은 7만 7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가 급격히 맹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기대 될 곳은 기업투자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투자확대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재계는 전(前)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투자확대를 약속했지만 말뿐인 잔치로 끝나곤 했다.

정부도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교육 개혁 등 경제 체질 강화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특히 지방 건설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세제 규제를 풀어 지방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65억원, 35억원, 31억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직 11명의 평균 재산과 청와대 수석들의 평균 재산, 첫 내각의 평균 재산 등을 각각 가리키는 수치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으로 현황이 공개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첫 국무위원을 내정했을 때 일었던 '부자 내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재산이 많다는 자체가 논란거리이지만 청와대 일부 수석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게다가 4명 중 1명꼴로 가족들의 재산은 신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재산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산형성 과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추정까지 낳게 한다.

내정될 때부터 논문표절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사회정책수석은 이번에도 농지매입에 따른 투기 의혹에 자생 확인서 급조 사설까지 드러나 뜻밖에도 농지매입에 따른 투기 의혹에 자생 확인서 급조 사설까지 드러나 뜻밖에도 농지매입에 따른 투기 의혹에 자생 확인서 급조 사설까지 드러나 뜻밖에도 농지매입에 따른 투기 의혹에 자생 확인서 급조 사설까지 드러나 뜻밖에도 농지매입에 따른 투기 의혹에 자생 확인서